
동아시아 통상질서의 변화와 시사점

이 주 관(KIEP 부연구위원)

jklee@kiep.go.kr

서 진 교(KIEP 선임연구위원)

jksuh@kiep.go.kr

1. 서론
2. 동아시아 통상질서의 변화
3.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

동아시아 통상 질서의 변화와 시사점

1. 서론

□ 세계 통상질서와 함께 동아시아의 통상질서도 변하고 있다.

-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der)로 대표되는 다자통상체제는 역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자국 이익 중심의 국수주의가 계속되고 있다.
 - GATT를 대신해 세계 무역을 관장해 온 WTO 다자통상체제는 도하라운드(DDA)의 부진과 상소기구의 기능 중단으로 인해 역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보호주의 성향의 조치들이 줄지 않고 있으며, 자국 이익 중심의 국수주의가 계속되고 있다.
- 미국과 중국의 양국 갈등이 점차 서방 선진국 대 중국의 갈등으로 변하면서 세계 경제와 무역에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 미-중 양국 간 갈등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차세대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 바이든 행정부 들어 동맹과의 연합이 강조되면서 미국과 그 전통우방인 영국, EU,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선진국과 중국의 세력 대결로 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세계 무역의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으로 서방 대 중국 간 대립과 갈등이 지적되고 있다.
- 동아시아지역에서는 RCEP 타결로 역내 결속력 강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CPTPP 확대 움직임으로 역내 결속력이 약해지는 서로 상이한 두 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 RCEP 타결로 아세안 중심의 결속력이 강화되는 반면 영국의 가입협상에 이어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해 아시아지역의 통상질서가 요동을 치고 있다.
-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다양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세계 무역을 제한하는 새로운 수입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대표적으로 EU의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에 적용되어 관련 상품의 EU내 진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함께 세계 무역은 서비스화·디지털화되고 있으며, 가치사슬은 기술·지식 중심으로 변하는 가운데 지역 간 거래 (between trade)보다 지역 내 거래(within trade)가 커지는 가치사슬의 지역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 세계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커져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서비스 무역액이 상품 무역액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국경 간 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향후 세계 무역의 서비스화·디지털화는 더욱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 2017년 기준 서비스 무역액은 13.4조 달러로 부가가치로 본 상품 무역액 13.0조 달러를 넘어섰다.

- 기존 저임금에 의존하던 가치사슬이 점차 기술 및 지식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도국의 노동집약적 상품의 무역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 이에 새로운 가치사슬은 저임금보다는 기초 인프라와 기술력, 지적권, R&D와 같은 무형의 자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지식중심의 가치사슬로 변하고 있다.

- 아울러 가치사슬이 계속 지역화되고 있다.

- 특히 아시아의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역내 무역이 급속히 증가하여 향후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 우리 농업은 이러한 격변하는 통상질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맞아야 하나?

- WTO 다자통상체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경우 DDA에 의한 농산물 시장개방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 복수국간협상인 CPTPP를 통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능성은 없는가?

- 서방 선진국 대 중국 간 갈등이 확대될 경우 농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조치에 따라 농약·화학비료 중심의 농산물 생산방식과 농산물 소비에 어떤 변화가 요구되고 또한 일어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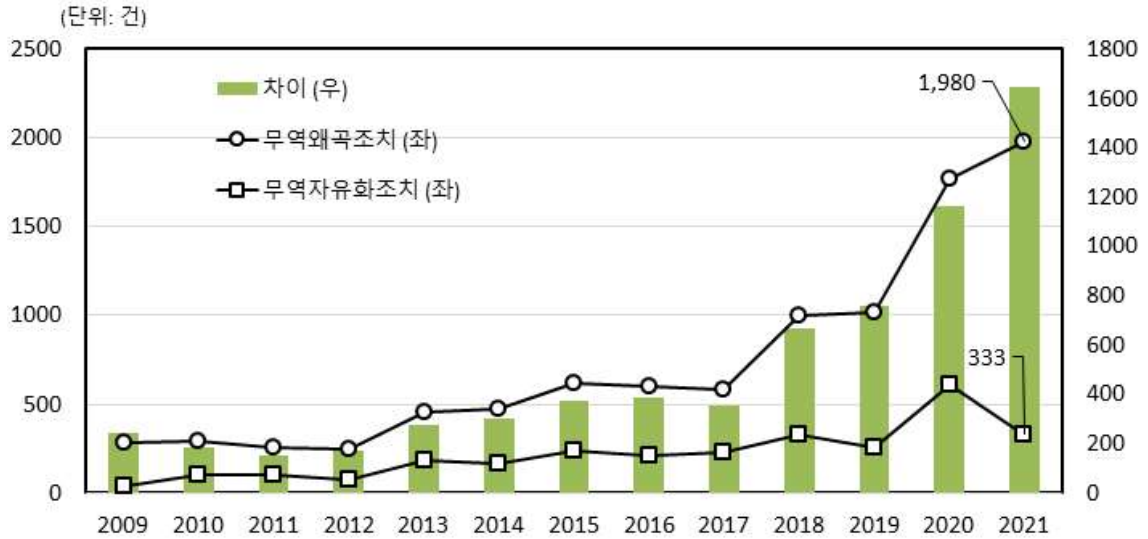
- 세계 무역의 서비스화·디지털화를 농업부문은 어떻게 활용하고 준비할 것인가?

- 가치사슬의 지식중심화와 지역화 움직임에 농업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2. 동아시아 통상질서의 변화

- 지난 반세기 이상 세계 무역을 관장해 왔던 GATT/WTO 다자통상체제가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 GATT를 대신해 세계 무역을 관장해 온 WTO 다자통상체제가 도하라운드(DDA)의 부진과 상소기구의 기능 중단 등으로 역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금년 말(11.30~12.3)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나 그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 * 수산보조금 등 일부 의제에서 합의도출 가능성이 있으나 농업, 비농업시장접근(NAMA), 서비스 등 핵심 분야는 아예 논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 WTO 상소기구(AB: Appellate Body) 문제도 현재와 같이 상소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상소기능 중단)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 제시 없이는 현재와 같은 상태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당분간 현재와 같은 상소기능 중단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WTO 다자통상체제는 당분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회원국들의 WTO 체제에 대한 신뢰는 계속 저하될 것이다.
 - *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WTO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립을 시도할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세계적인 보호무역조치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 Global Trade Alert에 따르면 2021년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는 1,980개인 반면 무역에 긍정적인 조치는 333개에 불과해 보호무역 조치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그림 1).
 - 무역에 부정적 조치는(harmful measures) 2009년 284건에서 2013년 456건, 2018년 999건, 2020년 1772건에 이어 2021년 1,98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 반면 무역에 긍정적인 조치(liberalizing measures)는 2009년 42건에서 2013년 181건, 2018년 329건, 2020년 607건까지 증가하다 2021년 333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그 차이는 점차 커지고 있다.

그림 1. 세계 무역조치의 추이(2009~2021)



자료: globaltradealert.org(https://www.globaltradealert.org/global_dynamics/day-to_1103/flow_all, 2021년 11월 3일 접속)

□ 그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양국 간 갈등이 서방 대 중국의 갈등으로 변모하면서 세계 경제와 무역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중 간 통상 갈등으로 시작된 양국 간 마찰은 단순히 상품 무역수지 문제를 넘어 차세대 먹거리를 위한 기술 패권경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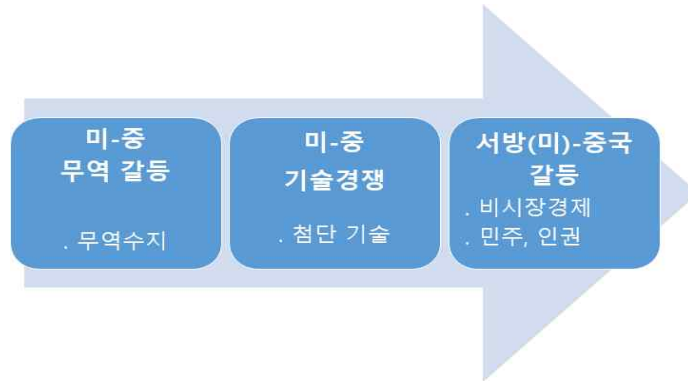
– 기존 단순 무역갈등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 반도체를 포함하여 인공지능(AI), 6G,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양자컴퓨터 등 향후 세계의 먹거리 향배를 결정할 핵심 고부가가치 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변했다.

○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이 기존 전통 우방과의 우호관계를 복원하며 동맹과의 공조를 통한 대중 견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 미-중 양자대결은 점차 서방 선진국 대 중국의 대결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그림 2).

– 지난 6월 중순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포함한 전통 민주주의 7개 선진국들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과 자유는 물론 기술이전 강요, 지적권 탈취, 과도한 산업보조금 지급 등 사실상 중국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채택했다.

– 또한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도국들의 인프라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방 진영의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11월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도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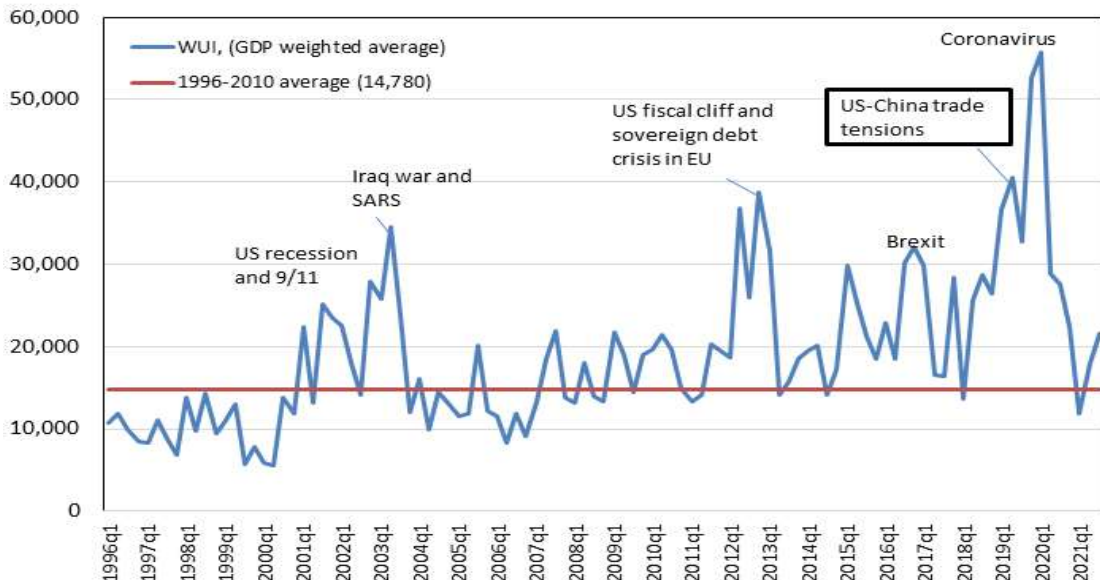
그림 2. 미-중 갈등의 특성 변화



자료: 저자 작성

- 이에 세계 경제와 무역에 있어 가장 큰 불확실 요인으로 미-중 대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중국과의 갈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실제 2019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당시 세계불확실성지수(WUI)는 약 40,500을 기록하여 코로나 19 이전까지 최고 수준이었다(그림 3).

그림 3. 세계의 불확실성 지수(1996~2021)



주: 세계불확실성지수(WUI: World Uncertainty Index)는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의 국별 보고서에 불확실 또는 그와 유사한 단어의 비중을 기초로 계산된 수치로 여기에 다시 백만(1,000,000)을 곱한 결과이다. 따라서 WUI 지수 200은 10,000개 단어 중 2단어가 불확실 또는 그와 유사한 단어임을 의미한다.

자료: World Uncertainty Index(<https://worlduncertaintyindex.com/data/>, 2021년 11월 3일 접속)

□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구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각국의 조치가 국제무역에 새로운 제약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조속히 해결해야 될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사회로 가기위한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 EU는 2050년까지 유럽을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대륙으로 만든다는 비전 아래 이미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란 실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일본도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순배출 제로 실현을 위한 그린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주요 부문별 탄소배출감축 이행목표를 제시하였다.

- 미국도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2050년 탄소중립(Net Zero)을 목표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7~63%의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사회 계획을 발표하고, 12월에는 "기후목표 정상회의" 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국제적으로 약속하였다.

○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제무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향후 세계 무역의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 대표적인 예로 EU가 지난 7월 발표한 '2030 유럽온실가스 55% 감축'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조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있다. 이에 따르면 EU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등의 상품은 해당 상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등의 EU로의 수출은 그 만큼 추가비용이 들어가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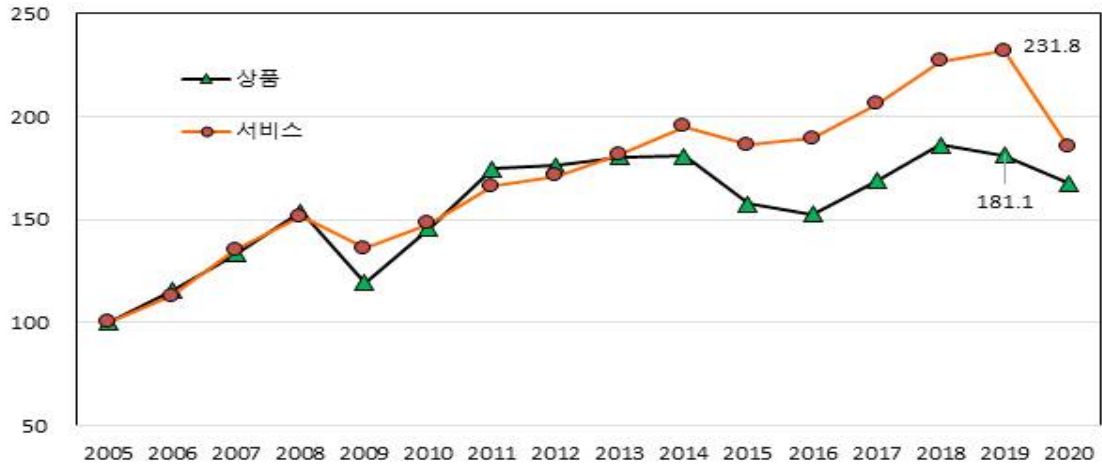
□ 이와 함께 세계 무역도 질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무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서비스무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 2005년 이후 서비스무역은 상품무역 증가세를 앞지르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된 2010년 이후 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4.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증가 추이(2005=100.0)



자료: UNCTAD STAT (<https://unctadstat.unctad.org/EN/Index.html>, 2021년 11월 3일 접속)

○ 동시에 세계 무역이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다.

– 세계 컴퓨터 보급률은 2010년 35% 수준에서 2020년 55%로 증가했으며,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도 2023년 말 53억 명에 달해 2018년 대비 39억 명에 비해 10억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

– 네트워크 연결기기 수도 2018년 184억 개에서 2023년 293억 개로, 1인당 네트워크 연결기기도 2018년 2.4개에서 2023년 3.6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휴대폰도 2018년 51억 대에서 2023년 57억 대로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휴대폰을 소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 소매판매액도 2020년 4.3조 달러에서 2024년 6.4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

– 이에 따라 ICT 서비스나 디지털 전송 가능한 ICT 서비스 무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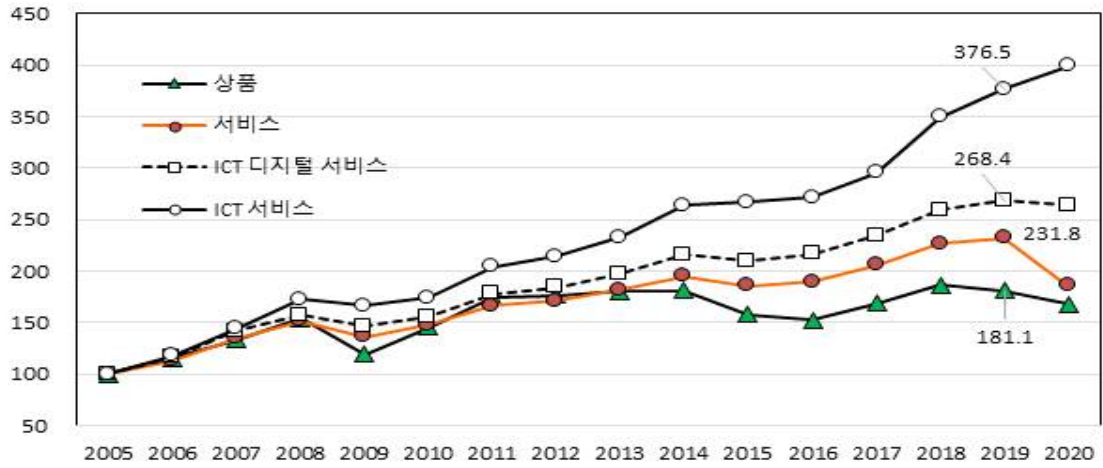
– 실제 2005~2020년 동안 이들 ICT 서비스의 무역 증가세는 일반 서비스무역 증가세를 크게 능가하고 있다(그림 5).

* ICT 서비스 무역: 1'00(2005) → 377(2019), 일반 서비스 무역: 100(2005) → 232(2019)

1) Cisco, Cisco Annual Internet Report (2018~2023)

2) Statista, "Retail e-commerce sales worldwide from 2014 to 2024"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379046/worldwide-retail-e-commerce-sales/>)

그림 5. 세계 ICT 서비스 및 ICT 디지털 서비스 무역 증가 추이(200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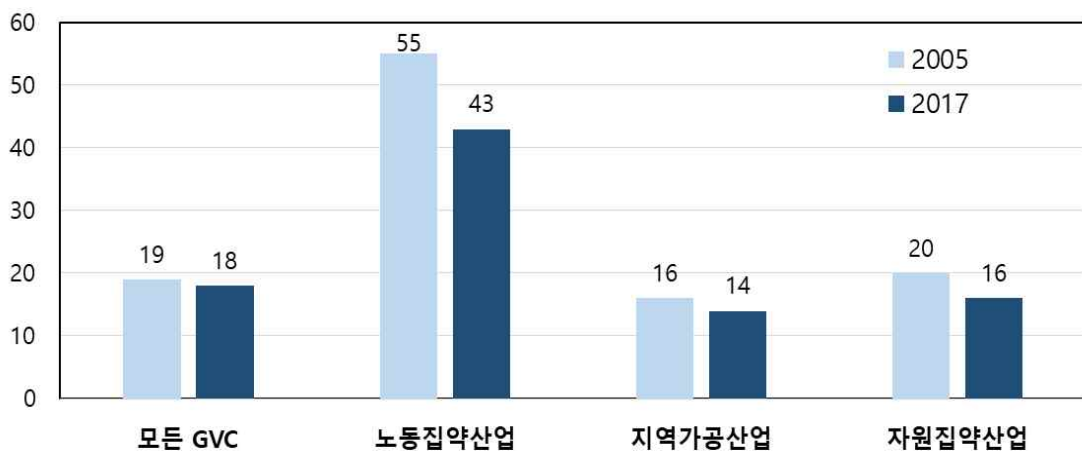
자료: UNCTAD STAT (<https://unctadstat.unctad.org/EN/Index.html>, 2021년 11월 3일 접속)

○ 글로벌 가치사슬도 점차 지식(knowledge)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기존의 저임금에 기초한 공급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따라 저임금에 기반을 둔 상품무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노동집약적 산업(예: 섬유)의 경우 저임금 국가에서 고임금 국가로의 수출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5%에서 2017년 43%로 떨어졌다(그림 6).

그림 6. 저임금 기반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의 변화(2005~2017)



주: 저임금 기반 수출이란 수출국의 1인당 GDP가 수입국 1인당 GDP의 1/5 미만인 경우로 정의한다.

노동집약적 산업은 섬유, 의류, 가구 등을 의미

지역가공산업은 식품 및 음료, 제지, 인쇄, 유리, 고무와 플라스틱, 금속 등

자원집약형산업은 농업 및 광업, 에너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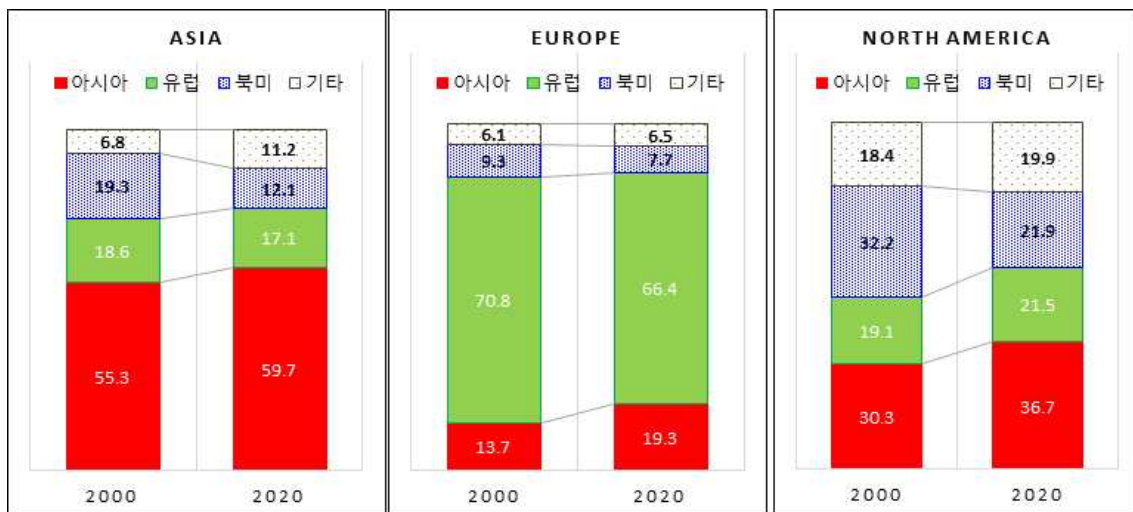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9), p36. Exhibit 5를 재인용

○ 특히 동아시아 지역가치사슬의 경우 역내무역 비중이 커지면서 지역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 2000~20년 사이 아시아 및 유럽, 북미 등 3대 지역 가치사슬에서의 무역량 변화를 보면 아시아를 제외하고 유럽과 북미는 각각 역내에서의 무역비중이 줄어든 반면 중국 중심의 아시아 가치사슬은 역내 무역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동아시아 역내 무역 변화: 55.3%(2005) → 59.7%(2020)

그림 7. 지역가치사슬별 역내외 무역 변화(2000~2020)



자료: UNCTAD STAT (<https://unctadstat.unctad.org/EN/Index.html>, 2021년 11월 3일 접속)

□ 이와 함께 최근 동아시아지역에서는 RCEP의 타결과 CPTPP의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저마다 자국 이익 중심의 통상행보를 보이고 있다.

○ 2020년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되면서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5개국의 메가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다.

– RCEP이 미국과 서방의 대중국 견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시아지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 ASEAN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로 일본이 꾸려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영국의 가입협상 개시와 함께 중국과 대만의 공식 가입신청으로 새로운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 중국의 가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잠재력과 협상력을 감안할 때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은 중국의 CPTPP 가입을 환영하고 있다).
- 중국이 가입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 그렇다고 미국이 CPTPP에 조기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에 패배하여 미국의 CPTPP 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 이에 따라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이 미국과 중국 진영 대결로 분열될 수도 있다.

3.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

- 격변하는 글로벌 및 동아시아 통상질서의 변화라는 큰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
- 동아시아 통상질서의 변화는 i) WTO 다자통상체제의 무력화, ii)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지속, iii) 미국 중심의 서방과 중국과의 갈등과 갈등, iv)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신규 무역제한 조치 등장, v)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중국의 발빠른 통상행보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들은 상호 연계되어 직간접으로 한국 경제와 한국 농업에 영향을 줄 것이다.
 - WTO 다자통상체제가 무력화되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이익 중심의 수입 제한적 조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신규 무역제한적 조치에도 WTO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 WTO 다자통상체제의 위기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결이 내재해 있으며, 이는 다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중국의 행보와 직결되어 있다.
 - 서방과 중국의 갈등 확대, 무역 제한적 조치 만연 등은 세계 수요와 투자를 위축시켜 우리나라의 무역(농산물 포함)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 세계적인 노동 및 환경 규제 등 다양한 새로운 국제규범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 농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필수가 된 상황이므로 외국인 농업 근로자의 노동환경이나 근로조건, 복지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농업생산 자체의 온실가스 배출은 물론 농가공 및 연관산업의 탄소배출도 중요한 문제이다.

□ WTO 다자체제의 위기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 사이의 연합 또는 복수국간협정 (PA: Plurilateral Agreements)을 통해 블록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되는 한 WTO 차원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되기는 불가능하므로 다자협정보다 서로 뜻이 맞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역화·블록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 대표적 예는 복수국간협정(PA)이며, 사실 현재 WTO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대부분 복수국간협상이다.

* 기 타결된 정부조달협상이나 정보기술협정(ITA) 등은 모두 복수국간협정이며, 현재 WTO에서 진행 중인 수산보조협상이나 전자상거래협상도 복수국간협상이다.

- 미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기존 전통 우방과의 관계 회복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하여 동맹국과의 연합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 최근 G7 정상선언은 미국을 중심으로 대중국 견제를 위한 선진국의 단결될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 이에 따라 향후 새로운 무역협정은 마음이 맞고 체제가 유사한 국가들끼리 그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복수국간 무역협정(PA)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유사한 국가간 복수국간협상이 확산될 경우 협상 타결이 빠를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시장개방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간 CPTPP 가입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 공식협상이 시작되면 타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 따라서 WTO 다자채널보다 복수국간협정을 통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해야 한다.

* 우리나라 농산물은 그동안의 많은 다자협상과 FTA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핵심 농산물의 경우 많은 예외를 통해 여전히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 탄소 중립 시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탄소 중립은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탄소 국경세 신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저탄소 농업기술의 적용 등 농업과 농촌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먹거리안보 위축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지속가능 농업을 위해 i) 자원순환형 농업 ii) 스마트 정밀 농업, iii) 생물학적 기술(biotechnology)의 적용이 필요하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국제 통상도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역과 환경 이슈가 대립할 경우 무역보다 환경친화적 또는 환경 우선의 국제 통상 규범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 환경친화적 상품 및 서비스 거래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으나 반대로 환경에 부담을 주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는 강력히 제한되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 서비스와 디지털무역 협정에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무역협정이 체결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

-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등 3개국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디지털무역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s)을 체결한 바 있다.
 - 우리나라도 호주, 칠레 등과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DEPA 가입도 고려하고 있다.
- TPP 때와 유사하게 미국이 DEPA를 확대 발전시켜 아태지역의 새로운 디지털 무역 협정을 통한 디지털 블록화를 추구할 수도 있다.
 - 특히 디지털무역은 아직 국제표준과 규범이 없으므로 지역 디지털무역협정을 통해 국제표준과 규범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이를 통해 중국과의 기술패권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환경조성도 가능하다.
- 이에 따라 디지털무역협정이 농산물 수출입에 주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우리 농업도 디지털화 및 서비스 무역 확대 흐름을 적절히 타야 한다.

- 스마트팜, 농업용 드론, 자율주행 트랙터 등 생산에 중점을 둔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수확 이후 유통 및 최종 소비자의 소비성향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디지털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 다만 농업인력의 고령화를 감안해 농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인력의 수급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 농산물 특히 가공식품의 전자 상거래를 통한 수출입 확대를 준비해야 한다.